

2014년 한중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 한국측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한자)	기관	직위
1	윤덕민(尹德敏)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장
2	신정승(辛正承)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3	최우선(崔寓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4	이지용(李志鎔)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5	조은일(趙恩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6	박진희(朴眞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7	박후선(朴厚宣)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연구원
8	조민(曹敏)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9	이기현(李基鉉)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부장
10	이창형(李昌衡)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전문연구위원
11	이영학(李榮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2	박병광(朴炳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연구팀장
13	차문중(車文中)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14	이호준(李昊竣)	KDI	민간투자지원실장
15	김정욱(金政昱)	KDI	분석평가실장
16	김영일(金榮一)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17	정철(丁澈)	KIEP	아시아태평양실장
18	최필수(崔弼洙)	KIEP	중국팀장
19	김종덕(金鍾德)	KIEP	다자통상팀장
20	홍면기(洪冕基)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장
21	장석호(張錫浩)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2팀장
22	이장욱(李章郁)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23	이원택(李元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24	장원석(張元碩)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실장
25	안장리(安章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책임연구원
26	이욱(李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27	이은정(李銀貞)	통일연구원	-
28	노숙영(盧叔暎)	통일연구원	-
29	김신혜(金信慧)	KDI	-
30	김영선(金英宣)	KIEP	-
31	윤선화(尹鮮花)	동북아역사재단	-
32	고은나래(高恩娜來)	동북아역사재단	-

제2차 한중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 출장 결과

◇ 12.16~18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국책연구소간 합동전략대화’가 개최된 바, 출장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출장 개요

- 프로젝트명: 학술 및 정보교류
- 기간: 2014년 12월 16일(화) ~ 18일(목) (출·입국일 포함)
- 장소: 북경국제호텔
- 참여기관:

구분	주관기관	분과별 기관		
		정치안보	경제협력	인문사회
한국측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측	국제문제연구원	-국제문제연구원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련부당대세계연구중심 -중국군사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예술연구원

2. 주요 일정

일시	개요	비고
2014.12.16(화)	12:20 대표단 출발게이트 집합 13:00 인천출발(OZ333편) 14:10 북경도착 18:00 환영만찬(북경)	주최: 중국국제문제연구원
2014.12.17(수)	전일: 회의 진행 저녁: 만찬(북경)	정치안보/경제협력/인문사회 분과별 동시진행
2014.12.18(목)	11:00 간담회 19:00 공항도착 및 해산	

3. 주요 내용

□ 중한경제협력의 고차원 설계추진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 아젠다1: FTA시대를 지향한 중한 경제협력, 아태지역 FTA지대 건설 추진

[발표 1] 웨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연구원
“아태 FTA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자”

- 지난 10월, APEC 제 22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21개 회원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로드맵을 통과시켰음. 또한 점진적 추진과 협의 일치 원칙에 따라 아태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는 아태 경제협력체의 지역통합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함.

- 아태 FTA가 형성될 경우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로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많은 회원국들은 중요한 무역파트너와 수출시장으로, FTA의 체결은 중국과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심도 깊은 제도적 협력을 추진함. 현재 아태지역에는 상당히 복잡한 FTA 네트워크가 얽혀있음. 협정 간에 격차, 자유화 수준, 적용하는 규제의 기준,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상당함.

- 한중 협력을 통한 아태FTA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 첫째, 한중 FTA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아태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 둘째, RCEP, 한중일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태 FTA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함. 셋째, ‘동아시아 퀘도’와 ‘아태 퀘도’의 호환과 연결을 추진해야 함. 넷째, 각 국이 FTA 실천을 통해 아태 FTA의 최종 구축을 위해 경험을 제공.

[발표 2]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태실장

“아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 최근 국제통상에서의 화두는 메가 FTA와 글로벌 가치사슬임.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에 따른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국제통상 환경 변화의 큰 흐름임.
-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의 개선 및 원산지규정의 단순화를 통하여 경제통합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은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원산지 규정 및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그 후생 증대에 보다 중요함. 아태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을 통해 생산네트워크의 소지역단지화(sub-regional clustering)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제안: 첫째,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함. 둘째, APEC은 지역통합 초기단계부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함으로써 역내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셋째, 원산지 증명의 단순화를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연계비용을 감축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이 필요함. 다섯째, APEC 창설멤버이자 중견국인 한국은 그동안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통합 논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발표3] 쉬홍창,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원

“FTA 시대의 중한 경제협력: 아태지역 FTA 추진”

- 올해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가동하기로 결정함. 중국과 한국은 아태지역 경제무역과정에서 대외개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임. 중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양국 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아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으로는 TPP와 RCEP임. RCEP은 환경등의 문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캐나다 등의 주요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직, 미국과 중국은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RCEP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중국도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음. 향후, RCEP와 TPP협상이 타결된 후 양자간의 융합 추진이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하는 경로가 아닐까 싶음.
- 중한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파트너, 최대의 수출목적지, 최대의 수입원천지임. 한-중은 긴밀한 협력관계, 가치사슬 안에 있으며 삼성 같은 한국의 대기업의 중간재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음. 따라서, 한중 FTA는 서로 이익이 크고 아태지역 FTA관련해서도, 한중 양국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RCEP와 TPP의 융합을 추진하고 FTAAP 구축의 타당성 연구도 추진해야함. 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RCEP 및 TPP 협상간의 소통을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2대 자유무역협정이 참가국, 규칙, 개방도 등 면에서 융합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국들을 포함하는 자유무

역지대를 구축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추진해야 함.

[발표4]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 실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서비스 자유화: STRI를 중심으로”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무역규모가 급격히 성장함. 수출의 비중은 전 세계 1위이며 수입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성장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발달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2014년 발표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개방수준을 비교검토하고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전반적인 개방수준을 보았을 때 한국의 개방수준이 중국의 개방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각각 0.208과 0.452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개방수준이 높음. 하지만, 국가별 개발단계, 국가별 서비스 산업의 비중,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계량화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단순한 상호비교는 실질적인 서비스 분야 개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국은 서비스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점진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014년 한중 FTA 타결과 함께 양국이 서비스 분야 점진적 추가 개방 및 협력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토론]

Q 최필수(KIEP): TPP등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알겠음. 그런데, 이런 지역통합에 중국의 개방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베트남도 이미 TPP 가입을 하지 않았음? 중국은 높은 속도의 개방은 하지 않음. 지역통합이 얼마나 빨리 되냐는 중국의 개방속도에 달림. 하지만, 이게 쉬울 거 같지 않음. 중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고, 한국은 개방형통상국가(무역의존국)인데 비해 중국은 무역을 줄이고 내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웨버(상무부): 중국이 자본이 충분한 국가이고, 내수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방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음을 인지해주었으면 함. ‘18기 3중전회’에서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논의를 했고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함. 이는 중국의 FTA관련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음을 뜻함. 개혁개방, 즉 대외경제무역 30년이란 시간동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고 향후 심도 높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함.

Q 정철(KIEP): 베이징 로드맵 발표 이후, 중국은 RCEP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TPP에 대응을 했던 경향이 있음. 그러나, RCEP은 수준이 낮아 FTAAP 경로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 RCEP을 가속화해야한다고 하는데 RCEP의 문제는 주도국이 없다는 것임. TPP는 미국 주도인 반면, RCEP은 실제로는 아세안 내에서 조차 컨센서를 이루기 어렵고 중국이 주도국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중국이 RCEP 가입을 가속화 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임.

A 쉬홍창(국무원발전연구센터): RCEP은 아세안 위주의 연합이라 확신함. RCEP에서 중국이 주도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힘을 합쳐야함. 그렇게 한다면 아태지역 협력에 향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함. 동아시아지역의 사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협정임.

A 웨버(상무부): 중국이 TPP에 관심을 적게 보이고 RCEP 협상을 가속화 하는 이유는 주변국가와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것임. 중국은 책임이 높은 국가여서 각 지역별로 각 지방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함.

○ 아젠다2: 개방형 경제의 새 동력,
중한경제 전환의 경험 공유 및 협력

[발표 1] 왕신,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연구원
“한중 서비스업의 협력 추진”

- 중국의 서비스업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함. 또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농업 취업인구도 초과함.
-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임. 또한, 한중 양국은 유사한 문화전통과 가치관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간교류가 활발하고, 상호간의 동질감이 비교적 강하므로 서비스업 협력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음.
- 한중 FTA는 양국이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는 주요한 제도적 보장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 기업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관련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며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함.

[발표 2]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분석평가 실장

“의료분야에서의 혁신: 경제성장에서의 전략적 접근”

- 최근 한국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료분야중점으로 혁신, 규제개혁,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GDP의 7.1%인 82.9조원에 이르고 있고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보건의료 분야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때문에 최근 한국 의료기관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임. 2012년 기준, 15.5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2,52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그 중 4분의1이 중국인 환자임. 한국 의료기관 활동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의료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함.
- 이러한 의료부문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에서의 혁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속한 의료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에 의료산업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가 증대되어야함.
- 무엇보다,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 혹은 규제완화의 정

책이 요구됨. 한국의 의료산업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의료산업을 공공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현재 3개년 계획으로 의료분야가 힘을 받고 있으나 연구개발지원을 높이고,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발표3] 천홍나,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보조 연구원

“한중 문화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체제 전환 및 경제협력발전 추진하자”

- 한중 수교 20여년 이래 양국의 경제협력 및 상호간의 의존성은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 또한 두드러지고 있고 이는 양국의 경제발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됨. 문화 교류는 유대감 및 동질감을 강화하여 경제발전협력에 이바지함. 서로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간격을 없애며 분기와 마찰을 줄여야함.
- 문화산업 발전 추진은 경제체제 전환의 수요임. 또한, 한중 문화산업은 상호보완성이 커 산업협력 가능성을 제고함. 한국의 문화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중국보다 훨씬 높은데 두 나라는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발전 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한류는 지금까지도 활기차며 이는 한국의 패션, 요식, 미용산업의 발전을 야기함. 또한 중국 내에서도 외국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며 중국어 학습 서적 판매량이 급증함. 즉, 양국의 문화교류가 이미 꽤 훌륭한 발전을 가져옴. 그러나, 양국 문화 무역에 심각한 언매치드 현상도 존재하는데 양국은 반드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과정에서 공감대를 넓히며 공감대 속에서 발전을 추동해야함.
-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좋은 환경 마련이 시급한데, 먼저 법률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인재양성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중점분야 협력을 강화해야함.

[발표4]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분석평가 실장

“한국의 PPP제도 경험과 교훈”

- 한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외 민간재원을 활용함. 이의 대표적인 한국의 민간투자 사업, PPP 제도를 소개하려함. PPP는 한국의 public, 중국인 private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식 등으로도 활용 가능함. 각국의 PPP제도를 이해함으로써 한중 협력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함.
-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가용 수 증가로 도로 정체 현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산업이 정체되어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했으며 PPP제도에 눈을 돌림.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을시 정부의 재정난으로 98년 이후 민간투자법을 개정함. 이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완으로 민간투자제도가 한국에 자리를 잡음.
- PPP에 대한 비판적 시각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나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외환위기시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했고, 한국 경제가 안정된 이 시점에서는 다시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실정임.
- PPP사업추진시에는 세금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지, 장기적 채정부담을 항상 고려해야하고 전담기관이 필요함. 또한, 새로운 PPP사업개발을 위해 국내교육훈련프로그램, 국제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함. 현재 한국은 중국의 PPP센터와 교류하고 있고 이가 양국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차문중(KDI): PPP제도의 한국경험을 중국과 공유하고 싶음. PPP의 운영을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 접근에 따른 역량을 강화해야 함. 중국은 재정이 튼튼해서 민간부문의 재정 유치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있지만 중장기적 생각한다면 PPP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음. KDI에 KSP란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국과도 이 사업을 진행 중임. 한국-몽고 KSP를 통해서 몽고에 PPP 제도를 전파하고 현재 몽고정부에서 이를 수행중인 사례가 있음. 중국에서도 향후 이를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봄.

[토론]

Q 천홍나(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한국의 PPP 메커니즘은 성숙된 것 같음. 중국에서도 관심이 있으나 보조금이 너무 커 우려가 있음. 어떤 해결안을 추천하는지?

A 이호준(KDI): 한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정부분은 정부가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음. 보조금의 수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수입을 얼마나 가져갈지의 여부인데, 사업자 선택 경쟁과정 속 이미 지나친 수익보장은 못하게 되어 있음. 보조금 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용료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연계되어 있음.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기업과 협상을 하고 맹목적으로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Q 김정욱(KDI): 천홍나 연구원께 질문이 있음.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동시 해외컨텐츠 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일정수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단초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A 천홍나(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는 완비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관리하는 부문이 소홀한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위의 법률제도가 완비 되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 예를 들어, 타국가와의 저작권 관련법도 더 만들 것으로 예상됨.

A 차문중(KDI): 저작권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창조성과 IT가 중국에서 빠르게 발전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때문에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 같음.

Q 웬버(상무부): 김정욱 실장님께 질문 있음, 한국의 의료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장벽이 높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중 FTA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한 것이 아님?

A 김정욱(KDI): 중국에서 의료산업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허가 시간 지연이 가장 큰 문제임. 라이선스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으나 한국의 일정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나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논의되

고 있는 상황임.

Q 웨버(상무부): 예전에 뉴질랜드와의 FTA 협력에 있어, 라이선스를 교차 인정한 사례가 있음. 한중 양국 간에도 장기적인 라이선스까진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라이선스를 교차인정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음.

A 김정욱(KDI): 인허가가 2년이상 걸리는 이상, 단기 라이선스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임.

A 차문중(KDI): 인허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단기 라이선스의 실효성은 없음.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함.

Q 쉬홍창(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한국이 타국가와 체결한 FTA의 서비스부문의 수준이 높음?

A 김종덕(KIEP): 한국의 서비스분야 개방수준은 중간정도 수준임. 하지만, 한EU과 한미에서는 그 수준이 높음. 2005년도 도하 개발 아젠다에 기초한 양허수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일본, EU, 호주 등에 비해서는 개방수준이 낮음.

Q 쉬홍창(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한EU와 한미의 서비스부문 개방수준은 높지만, 기타 국가와의 수준은 중등이라는 말씀이신지?

A 차문중(KDI): 한국은 선진국보다 서비스 개방의 높은 수준은 아니나 경쟁강화를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선진국들 간의 경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움직임. 타 국가들과는 낮게 체결된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개방수준을 매우 높이는 것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임.

○ 아젠다3: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한협력

[발표 1] 두귀천,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연구원
“대외투자 발전추세 및 글로벌 경제관리의 재구성”

- 현재 유럽과 미국이 점차 양적완화를 종료하며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하고 있음. 이에 동아시아지역에서 엔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며 지역 내 무역 및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중 양국은 신흥경제국과 신흥대국에 유리한 글로벌 경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함. 한국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을 확대하고 투자 기회를 증대시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임.
- 글로벌화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는 국제 경제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음. 2014년 베이징 APEC에서 아태지역 가치사슬 관리의 보완을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게 되었음. 특히 한중 FTA가 가동되면 양국의 기업들은 서로의 중간제품에 대한 선택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가치사슬의 융합정도와 호환성도 강화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둘러싼 양국의 협력은 중요한 의의를 지님.
- 향후 양국 공동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동아시아 가치사슬, 특히 한중, 한중일 간의 가치사슬 관련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하고, 더 나아가 FTA의 심층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부여해야 함.

[발표 2]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팀장
“ADB, AIIB and NEADB”

- 최근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 관련 중국의 정책은 ‘접경 지역 교통 인프라 투자’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설립 추구로 대표됨.
- AIIB가 중요한 것은 ‘접경 지역 인프라 투자’와 ‘일대일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융자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이제까지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거나, 기존 국제개발금융의 지원을 받아야했음.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한계가 명백함. 먼저, 중국 정부의 재원만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은 명분에서나 실

리에서나 부적절함. 중국 정부를 재원으로 하는 인프라 건설은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인데, 현지 및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

- 기존 국제개발금융 조직들은 중국이 관심을 가진 인프라 건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임. 게다가 중국의 인접국들인 중앙아시아 독립국들,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투자회수가 어려운 최빈국이거나 정치적 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 국제금융조직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려움. 실제로 미국 측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AIIB 추진을 미심쩍어 하고 있음. AIIB가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 설립될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변경 지역 개발을 위한 금융 조달에 큰 힘을 받게될 것임.
- 현재 한국이 주장하는 NEADB과 관련하여 어떤 손에 잡히는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중국 밖에 없음. 한중 양국은 2014년 7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GTI를 2016년까지 국제기구로 전환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NEADB의 설립에 있어 역내 최대 경제대국이자 가장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함.
- 결국 한국과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옵션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한국이 AIIB 설립에 참여하고, 중국은 동북아 지역 관련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는 것. 둘째,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NEADB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되 AIIB와의 균형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 이 때 한국은 AIIB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옵션이건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밀접한 협력이 요구됨.

[발표3] 쉬홍창,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재외경제연구부 연구원
“글로벌 경제속 한중 경제협력”

- 세계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 여러 큰 변화가 있음. 특히, 90년대 이후 새로운 신흥경제국의 성장이 두드러짐, 이는 세계경제에서 큰 변화임. G20는 선진국 중심의 G7과 신흥국 12개국을 포함하는데, 이 신흥 12개국이 점점 세계GDP의 큰 비중을 차지함.

- G12의 무역은 이제 64.9%를 차지함. 신흥국의 성장속도 또한 매우 빠름. FDI 규모를 봐도, 신흥경제국의 규모 성장이 매우 두드러짐.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G7이 제시하는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임. 때문에 글로벌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이제는 G12의 의견이 필요하고 이는 신흥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뜻함. 신흥국의 국제정책 추진은 이제 경제추진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신흥경제체제의 경제향상을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철회하고 빠르게 RCEP을 체결하는 새로운 협력양상을 보인다면 아태지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 이는, EU처럼 새로운 경제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유럽처럼 아태지역도 뭉쳐야 함. 이에 한국이 AIIB에 가입하기를 요함.

[발표4]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부장

“글로벌 금융규제환경의 변화와 금융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세계경제의 동조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각 국가들의 GDP 성장률, 주요국가 및 지역의 주식시장 수익률, 실물과 금융부문등을 보면 동행성과 높은 상관성이 보임. 이는 역내에서, 국제적으로도 금융위기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즉, 경제세계화와 위기의 세계화가 나타남.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중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및 파산은 실물경제 침체를 야기함. 특히, 납세자 손실부담은 금융불안 확산을 초래함.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및 취약한 복원력, 납세자 손실부담, 위험의 국제적 전파 등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이 야기됨.
- 대마불사 문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경향을 야기하며 대형금융기관 부실의 국민경제적 영향은 납세자에 손실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는 납세자 부담에 의한 공적구제 경향이 야기됨. 국제적 활동성이 큰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은 한 국가의 위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채널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리만브라더스, AIG, Fortis등의 대형금융기관의 파산

은 금융당국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융불안의 국제적 확산을 초래할 수 있음. 즉,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자국 중심의 독립적인 금융정책 및 규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시스템리스크 관점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가 도입되고 금융자유화 및 금융국제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하고 더불어 금융시스템의 안전판이 강조되는 등 글로벌 금융규제환경에 변화가 있음. 특히, 금융기관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바젤 규제체계가 도입됨. 또한,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도입이 강조됨. G20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한국에서도 주요 규제방안 도입 검토되고 있음.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차등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은 파산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정리체계가 도입됨. SIFI는 몇 선진국들이 도입하여 이행중에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 금융분야 국제협력과제에 대해 정리하자면, 국제적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능성 제고와 금융당국간 정보교환체계, 양자다자 협력체계 마련,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규제 도입 및 국제협력방안이 이행되는 실정임.
- 금융분야 한중 협력기본방향에 대해 제안하자면, 금융안정성 제고와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금융자유화, 국제화의 효용 확대 추진, local currency 사용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원, 위안화 사용 활성화를 통해 기업 환위험 헤지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며 결제통화 다변화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추구해야 함.

[토론]

Q 두귀천(상무부): 한국의 AIIB 가입에는 우려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개발 때문인지?

A 최필수(KIEP):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동북아개발은행과 AIIB는 성격 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점이 만들어질지 않을까 생각함. 한국의 중국시장 진출 및 중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AIIB 가입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 간담회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 참석자: 차문중, 김영일, 이호준, 김정욱, 김신혜 (이상 KDI), 정철(KIEP), 웬버(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 내용: 한국측 참석자와 웬버 모두 이번 회의 결과 한중 양국 간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통해 더 활발한 무역 및 상호 협력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함. 한국측은 내년 있을 제 3회 합동전략대화에서 한국이 경제산업의 측면에서 중국보다 앞선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제도를 전파할수 있는 장이되길 바란다고 함. 중국측 웬버는 향후 한중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중일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협력을 공고히 하자고함.

4. 주요 요약

□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

- 한국과 중국의 참여자들은 한중 FTA의 체결이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함.
 - 한국과 중국의 경우 개방수준이 상이함. 한중 FTA 타결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개방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한중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추진이 중요함.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효율적 가치사슬을 발달시켜야 함.
- 아태지역 내 주요 경제국들은 모두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APEC 회원국들의 역내 FTA 체결 비중은 30%에 달하며, 역내중간자 교역비중이 EU, NAFTA와 같은 다른 지역 경제기구보다 높고, 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는 등 한중일 3국의 생산네트워크도 강화되고 있음.

- 단,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대한 로드맵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음. 이러한 연구에 한중 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APEC의 경우 ‘개방성’이 그 특징으로 국가가 아닌 지역산업을 중시하여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선례를 참고로 역내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적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함.

- 아태지역은 TPP와 RCEP이라는 두 개의 큰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국의 측면에서 두 협상은 상호 배타적으로 보임. 미국은 TP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은 TPP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양국간 투자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중국측에서는 TPP와 RCEP이 타결된 후 양자 간의 융합추진이 아태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TPP와 RCEP이 어떻게 융합되어 추진되는지가 아태지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참여자들은 RCEP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한중 서비스 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중 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의 개방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구체적으로 FTA 정식 발표 후 2년 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중국은 최근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정책을 완화하였으며,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2017)을 발표하면서 한중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국 서비스 협력의 핵심분야는 생산성 서비스업, 관광, 의료, 문화의 네 가지 분야임. 특히 한류와 중국풍 등과 같은 최근의 경험을 통해 중국에서는 ‘문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상대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한국과 중국의 참가자들은 양국의 경제전환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양국 정부는 지식공유산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중국에 전수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식공유산업을 추진하여 중국의 관련 법제 정비를 촉진하는 등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와 한중협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변화는 세 가지 층위에서 한중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한중 협력: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화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 등을 통해 양국 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아태지역경제: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역내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춰 역내 21개국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그 역할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음. 단, 빈곤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 지역기구인 ADB에 참여하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AIIB 참여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 세계경제: 세계금융위기 이후 G7이 제시하는 금융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신흥국, 즉 G11의 역할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됨. 중국측 참여자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해야 하며, 무역보호주의 등을 지양하는 ‘공평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